

野, 서울 경계경보 오발령에 “위기 증폭” 비판

北 정찰위성 발사 새벽 큰 혼란
민주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
정의 “책임전가 속 시민 불안”
국힘 “안보, 지나친 것이 많아”
오세훈 “과잉 대응, 오발령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이로 인한 서울지역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부실한 위기 관리 시스템 탓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것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



합참은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

던 위기 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오늘 아침 비상 사이렌과 잠을 깨운 재난 문자에 놀란 국민들이 많다. 단 한 순간의 오판으로도 평가가 깨지고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대피 경보를 내고, 행안부와 서울시의 오발령 책임 전가 기싸움 속에 서울시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도록 만들었다”며 “부실 안보태세, 부실 전파 시스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쟁이 나면, 이겨도 아무 소용없다. 전쟁과 무력 충돌을 사전에 막는 대화와 평화만이 국민이 살 길임을, 위정자의 책임임을 남북 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과잉 대응이라 할지라도 재난 관리, 안보 측면에서는 “지나친 것이 낫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위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쇼’에 출연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장은 서울시 청 브리핑실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 지령방송 수신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보수정권, 언론장악 DNA 또 발현”

SNS에 방통위원장 면직 비판
“MBC 압수수색은 사적 보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번 발현됐다”며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 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 면직 처리와 MBC 기자 및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협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선언이다”며 “방통위원장 한 명 속아내려 수단·방법 안 가린 채 없는 죄만 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기어이 잘라

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며 “그간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무력화시키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 “6월내 선거법 합의안 만들자”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
“정파보다 국민 이익 먼저 생각”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개원 75주년을 맞아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6월)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치제도, 다양한 인재

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도 필수적”이라며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의회외교 실질화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며 민생인 시대, 의회외교도 국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에 이어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 외교 활동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들도 한분 한분이 외교전사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5월31일 오전 10시20분에 개원했다.

제헌국회는 7월12일 헌법을 제정했고, 7월20일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을 선출해 행정부를 구성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송갑석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 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서 의원과 송 의원은 우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상을 받았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은 인구 감소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1일 발의됐다. 지난해 5월 국회의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업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제정법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서삼석 송갑석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다.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중소기업 스마트 산단 현장 방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송 의원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입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남국 “윤리특위서 성실히 소명”... 탈당 후 첫 국회에

거액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나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에서 비정상 거래를 지적했다’는 질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회의 출석 및 자진사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의원 스스로도 아마 여러 생각을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서울=김선욱 기자